데스크 시각

광주·전남 미래 열 그랜드플랜 마련할 때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부채 의식은 상당했던 것 같다. 취임 초 호남 총리 내정에 이어 5·18 관련 일련의 신속한 조치만 봐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문 정서'를 불식시키고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호남민의 선택에 보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읽힌다.

그래서인지 벌써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 사항과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거기에는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제시한 한전공대와 같은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이 있고, 지자체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예컨대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 콘텐츠 등 3대 밸리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이다. 전남도의 경우는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 산단 조성, 무안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광양만권 첨단신소재 산업 육성,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조성, 서남권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국가 생물 의약 집적단지 조성 등이다.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 온 광주·전남이기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성급하다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 어찌 보면 지금이 호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다.

부채 의식에 기대서야

하지만 이쯤에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 문 대통령의 부채 의식에 기대어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견지해 온 추진 방식이라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들어주는 정도일 게 뻔하다. 그 또한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흐를 가능성이 짙다.

이와 관련 씁쓸한 기억 한 토막. 십수 년 전 기자는 중앙 예산 부처 과장과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 엘리트라는 자부심에 절어 있던 공무원이었는데 당시 푸념처럼 내뱉었던 말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잊히지 않는다. "광주·전남에서 예산 타러 오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준비가 전혀 안돼 있어요. 달랑 서류 몇 장 들고 와서 막무가내로 예산만 달라고 하지 기획이라는 게 없어요. 무엇을 주려 해도 명분이 약하니 어찌합니까"

그저 스쳐 지나간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부끄러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작금의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간간이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면 말이다.

아무리 광주·전남을 중시하는 정권이라도 일방적인 지원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해 주기만 바라고 있다면, 지자체나 지역민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균형 발전을 견인해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백년하청이다.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 있어야겠다. 우선은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지역민 스스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사업과 사업 간의 이종교배, 유기적인 협력 체제,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그랜드플랜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세워 새 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당장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먹거리 플랜이 좋은 예가 되겠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본 틀로 한데 묶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균형 발전 큰 그림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학계, 지역 정치계, 경제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 균형 발전 그랜드플랜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지자체만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민이 힘을 모아 줘야 그랜드플랜은 힘을 얻는다. 지역민이 참여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은 새 정부의 예산 집행에 충분한 명분과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파괴력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상생 차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한다면 금상첨화다. 시도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그랜드플랜은 추동력이 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마냥 기다려 주지 않는다. 광주·전남 미래를 담보할 절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은펜칼럼

문재인 대통령께

임 명 재
약사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멋지다. 헌법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계적 수준이다. 정부가 부족하거나 부패하면 가차 없이 바꿔버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막강하고 무서운 국민권력을 갖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선택을 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또다시 부족하다면 다음번의 선택을 또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의 실체를 파악했을 이제 막 새출발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대통령은 국민 중의 한 사람을 대통령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5년간 위임을 해주는 것일 뿐 영원한 권력이 아니다. 대통령은 왕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기업으로 치면 대표이사의 위치이어야 한다. 국민 전체가 1주씩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것과 마찬가지임으로 그 대표이사의 업무내용을 가능한 주주들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양한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통령의 판단으로 최우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국정을 운영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추진해야할 업무 중에서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대북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서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진부한 대북정책 때문에 지금의 북한위기가 고조되었다. 과거 정부는 문제만 키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더러 '사드'라는 위험요소를 우리 땅에 끌어들이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지금의 중국은 과거 몇 년의 위치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우리의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미국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는 나약하고 전근대적인 정책으로는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기주의적 정책을 대놓고 발표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자주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심각한 파국에 빠져들 수 있다. 우리의 국력이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고, 이들 국가들은 한반도의 전략적인 존재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지막지해서 미국과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략적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자신들의 위치를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력충돌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평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우리의 국력을 키울 수 있고, 정체되어 있는 내수문제와 일자리 창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함께 풀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저출산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출산을 해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직장을 얻기 위해 또는 힘들게 얻은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젊은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력을 위해 기업은 미래의 직원과 소비자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 해결하길 바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은 비정규직을 요구하고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만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낮아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공평한 세상을 지켜주길 바란다. 공무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문화를 키우고 좋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소위 권력기관들은 국민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소위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떼어내고 각 기관들 상호 간 견제와 협력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역사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한다. 부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국민수준에 걸 맞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 고

지역사회와 대학

이 구 형
미국 실리콘밸리 뉴로스카이 공동창업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술들의 발전 결과가 나타나는 가까운 미래의 인간생활과 산업, 정치 경제, 국제관계 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세계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사람이 기술 개발에 방향을 맞추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항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인간이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첨단 기술의 개발도, 또 활용도 인간이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기술의 개발과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가까운 미래를 대비한 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한전에서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새로운 대학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화지에 그리는 새로운 그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문기사들을 통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는 한전 공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중 약간은 우려되는 소문이 들려왔다. 새로운 대학의 기본 조건인 위치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 사이에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새로운 대학의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졸업생들의 사회 기여 등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위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이 새 대학의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사회가 대학이 배출하는 졸업생들이라는 열매를 오랫동안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의 미래를 보며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대학을 상징하였던 상아탑은 사회 변화와 함께 발전하지 못한 채 사회에서 활용가치가 낮은 학위증 소지자들을 배출하였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의 효과를 의심받아 왔다. 지방 대학의 경우 인재를 양성하여도 이 인재들이 졸업과 함께 대도시로 떠나버려 지역 사회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지역사회와 대학은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지방에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은 대학 캠퍼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 사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환경과 생활의 편리성,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자신들이 공부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취업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자신이 공부한 지역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도 발전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대학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존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문화 시설이나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없이 벌판이나 산기슭에 위치한 건물들에 갇힌 대학의 학생들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나 애정을 가질 수 없다. 졸업장을 받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날 뿐이다.

선진국에서도 과거에는 대학을 대도시와 떨어진 한적한 장소에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많은 대학은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도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문화와 사회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도시 가까이에 설립되거나, 여러 도시 사이에 설립된다.

지역 사회에 위치한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고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 실리콘밸리와 주변에 35개의 대학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 요소들 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대학의 설립 위치를 선정할 때 어느 한 지역이 자신만의 작은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조건들을 고려하고 주변의 여러 지역들과 협력하여 대학과 지역 사회가 함께 공존 발전하며 장기적으로 모두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가 성공하는 방법일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들이 마주칠 4차 산업혁명의 파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충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 기술의 빠른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4차 산업혁명의 격변 속에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미 학교를 떠난 주민들과 지역 사회, 기업들과 정부기관들까지 서로 협력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한전대학이 대학과 산업체, 대학과 지역사회, 대학과 정부 기관들이 함께 '공부'하며 발전함으로써 미래의 국제 경쟁력 있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社 說

'쓰레기 마당' 된 문화전당 시민의식 아쉽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시민 휴식 공간인 '하늘 마당'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이곳은 외국인과 타 지역 관람객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다. 이런 국제적인 문화 공간이 광주의 첫 인상을 흐리는 장소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루 동안 하늘 마당에서 100ℓ들이 쓰레기 봉투 20여 개를 수거했다. 평일(월, 화, 수, 목)에만 쓰레기 봉투 15~20개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말(금, 토, 일)에는 그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심지어 어린이날에 배출된 쓰레기 양은 100ℓ들이 쓰레기 봉투 80여 개에 달했다.

불법 투기한 쓰레기는 주로 음식 찌꺼기와 빈 병, 과자 봉지, 치킨 박스, 플라스틱 도시락 박스, 맥주 캔 등이다. 문화전당의 한 관계자는 "밤새 술판이 벌어지고 나면 하늘 마당 주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분리수거하기도 힘들다"며 "시민들이 밤새 먹고 놀다 버리고 간 쓰레기를 다음 날 오전 내내 치운다"고 토로한다.

하늘 마당은 6600㎡(2000평)에 달하는 공간으로 잔디가 깔려 있음에도 여느 장소와 달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문화전당 측이 주최한 공연도 펼쳐지는 열린 무대로, 최근에는 조명이 설치돼 대학생, 젊은 연인,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휴식 문화가 싹트고 힐링이 있어야 할 공간에 벌써부터 무질서와 실종된 시민의식이 뿌리내리고 있어 안타깝다. 하늘 마당은 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이자 아껴야 할 공공재이기도 하다. 하늘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 투기를 넘어서 타인의 문화 공간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악취가 진동하는 공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실종된 우리의 시민의식을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에서 5·18 헬기 사격 전모 밝혀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 헬기 사격이 육군본부의 작전 지침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감정 결과를 토대로 UH-1 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에 의해 이뤄졌다고 결론 내린 광주일보(4월 20일 자) 보도와 같은 분석 결과다.

광주시는 15일 광주 시청에서 헬기 사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헬기가 무장을 갖춘 시점에 대해 육본 작전 지침 가운데 'Hel기 작전 계획 실시' 명령서가 접수된 22일 오전 8시30분으로 추정하고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를 전일빌딩 헬기 사격 투입부대로 지목했다.

광주시는 육군본부 작전 지침 20사단 작전일지 등 군 자료, '12·12 및 5·18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 분석과 5·18진실규명 지원단이 진행한 관련자 인터뷰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에 무장이 진행됐고, 육군참모차장 황영시가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등에게 무장 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한 것으로 부연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 사격이 이뤄진 시점이 27일 새벽 4시부터 5시30분 사이로 추정했다. 새벽 공수부대 도청 진압작전의 공중 엄호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헬기 사격 실체가 신군부였음을 증명한 것이다. 더불어 윤장현 시장은 "5·18 헬기 사격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 차원의 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국가 차원의 조사권을 가진 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無 等 鼓

검찰총장의 퇴임사

송나라 최고의 문인 소동파는 22살이던 1057년 과거시험장에서 이런 답안지를 제출했다. "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때 상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인자한 것이고/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을 때 벌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정의로운 것이다/ 인자함은 지나쳐도 군자로서 문제가 없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한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인자함은 지나쳐도 되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고시관리위원장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구양수였다. 구양수는 이 답안지를 보고 망설임 없이 수석으로 결정했지만 잠시 뒤 2등으로 바꾸었다. 탁월한 시구가 당연히 자신의 제자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부러 바꾼 것이다. 당시에는 응시자의 이름은 물론 필적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고시관리관이 답안지를 옮겨 썼는데 수제자를 수석으로 뽑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소동파가 합격 인사를 오자 구양수와 함께 채점을 했던 매요신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어디 책에서 인용한 것인지 출전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자작시라는 것이었다. 소동파는 이미 천 년 전에 상을 줄 때와 달리 벌을 줄 때는 신중할 것을 역설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법조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문구가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장에서 이 문구를 인용해 검찰권은 절제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김 총장은 임기를 7개월가량 남겨두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자진 사퇴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은 귀한 사람과 높은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법불아귀'라는 말을 남겼고 자신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해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우병우 사단'을 넘지 못해 국정 농단을 방치한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검찰 간부들끼리 국정 농단 수사를 끝낸 뒤 술판을 벌이면서 돈 봉투를 건넨 사건이 터져 검찰 수장으로서 체면을 구겼다.

김 총장이 떠나면서 후배들에게 건넨 충고는 검찰 개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검찰 개혁은 '죽은 정권에 강하고 살아 있는 정권에 약한' 검찰의 속성을 끝내야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